

"대지진 2주기, 시민사회 중심 대전환"<심포지엄>

 연속뉴스 | 기사입력 2013-03-11 16:04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국가로 표현되던 일본의 국가체제가 시민사회 발전으로 대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동일본대지진 2주년을 맞아 서울대 일본연구소 주최로 11일 오후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일본 역사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사회 변화를 일으킨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 "동일본대지진의 특징은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이 일본 사회 가치관 대전환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이전과 달리 원전의 존재가 양적·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게 됐다"며 "반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라앉아 있던 시민사회의 용기가 시작돼 국가의 총체적 대전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과정이 일본 지방분권의 시험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일본의 지역개발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지진의 부흥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부흥특구'와 '지방분권' 마련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ksw08@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한미, '키 리졸브' 연습 시작…北, 도발 가능성

 유해진, 김승우 빠진 KBS '1박2일' 합류

 '키리졸브' 돌입에 北 "최후결전"...팽팽한 긴장

 골프황제 우즈, 캐딜락 챔피언십 7번째 우승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국외 출장 중 별세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6139358>

인쇄하기 취소